Since 1969 광주·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
쉽볼 금융 살맛나는~

광전매일신문

유디철강(주) 철근공장 기계가공
철근 · 철강재 도 · 소매
유디기업(주)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설계
대표이사 신 현 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8번로 14-9(연산동 1280)
TEL : 062-942-7577 FAX : 062-942-7576
MOBILE : 010-2645-5325 E-MAIL : ud7577@naver.com

대표전화 062-525-9775 gjnews.kr FAX : 062-528-4566 2026년 3월 6일 금요일

'제7차 대중교통·자전거·보행(대자보) 중심 도시 광주시민포럼'. 사진=광주시청 제공

"전남광주특별시, 철도·BRT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해야"

7차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시민포럼
"농어촌까지 포함… 60분 광역이동체계 필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5일 광주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제7차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광주 시민포럼'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교통정책 방향과 기후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녹색교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희철 생태도시리빙랩 소장은 '전남광주시대,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의 질문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소장은 "기존 단일 도시 중심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보는 광역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철도(광역·도시철도)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축으로 한 30분 생활권·60분 광역이동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버스 재설계와 인공지능(AI) 기반 통합교통플랫폼(MaaS),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통을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이동권 보장'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기후 대응형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기후도시 광주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동수요 억제-대자보 중심 전환-기술 고도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유럽 주요 도시 사례를 소개했다.

고이지선 팀장은 "기후정책은 선언만으로 지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지방정부는 사업 수행자를 넘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승용차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사람 중심 기후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후에는 조진상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좌장을 맡아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조준혁 새푸른길 사무국장, 이삼섭 무등일보 차장이 참여해 '통합의 시대, 교통정책을 묻다'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를 통한 탄소중립, 사람중심 교통정책 전환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는 행정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에도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은 중요하다"며 "행정통합 시대에 맞는 대자보 도시 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자·보 도시 광주 시민포럼'은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을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2024년부터 ▲보행환경·자전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차없는 거리 ▲교통정책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6차례 개최했다.

/기동취재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주당 예비경선 20~21일 유력

본경선 25~29일 3개 권역 합동연설·투표, 결선 4월 초

시민공천배심원제 투표 29일… 구성·비율 초미의 관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룰로 5인 본경선·시민배심원제·권역별 순회경선을 원칙으로 정한 가운데 1차 예비경선은 오는 20~21일, 본경선은 25~2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민배심원제의 경우 29일께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심원 구성과 비율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지역정가에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출마예정자 8명을 5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은 20~21일 이틀간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고, 5인 본경선은 3개(광주, 전남 서부, 전남 동부) 권역별로 합동연설회 후 사흘 간 투표하는 방식으로 25~29일 닷새 동안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시민공천배심원단 투표는 본경선 마지막날인 29일로 예상된다. 2단계 경선에서 50% 이상 과반 지지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4월8~10일, 사흘 간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선거인단과 배심원단 구성 방식과 투표반영 비율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어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후보별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적용 사례와 첫 통합단체장 선거라는 상징성, 당원중심 정당 기조 등을 두루 감안해 ▲배심원 100% 완전배심원제 ▲배심원 50%·권리당원 50% ▲배심원 40%·권리당원 30%·여론 30% ▲당원 50%·배심원 25%·여론 25% ▲배심원 20%·권리당원 40%·여론 40% 등 크게 4~5가지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시민배심원제를 몇 명으로 구성하고 어떻게 선출할지는 논의 중이고, 선호투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합동연설회를 온·오프라인 중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심장부라는 상징성과 민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점, 후보 간 변별력이 뚜렷하지 않은 점에서 배심원제가 기존 표준방식인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의 유력한 대안으로 언급돼 왔고,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5인 본경선·시민배심원제·권역별 순회경선을 골자로 한 경선룰을 최고위에 공식 제안했다.

/이승원 기자

지 면 안 내

▶ 강기정 "펀드 종잣돈 3조 조성… 행정 중심은 광주" 3면
▶ 3·8세계여성의날… 광주시, 여성주권 실천 다짐 9면